

기업집단의 비교 제도론적 평가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문제 제기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한다. 긍정과 부정은 항상 병존하면서 정치 및 경제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더 불거지고는 한다. 지금은 신재벌정책 논의에서 보듯이 재벌구조 및 행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큰 문제이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 문제도 재벌구조에 기인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반재벌 정서위에 정부는 재벌의 단계적 분할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 재벌구조를 당연시하는 이중적 정책을 펴고 있다. SOC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재벌기업에 특례조치를 취한다든지, 고용, 물가, 수출 등 경제현안에 대해 30대 재벌을 주 대화채널로 하여 재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재벌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와 정부정책기조가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재벌을 평가하는 주체와 시점에 따라서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시스템상의 문제와 재벌구조상의 문제, 그리고 행태상의 문제를 분간, 식별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다. 예컨대 사회시스템상의 문제는 간과한채 정경유착의 병폐를 재벌구조의 탓으로만 돌리는 주장은 문제의 원인을 단일화한다는 점에서 힘있는 가설이지만 정확한 진단은 아니다. 그러나 재벌평가에 대한 양면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재벌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적다는 데 있다.

특히 기업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또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시장실패로 비판하는 정통

경제학(신고전주의)의 시각이 객관적인 평가를 지연시켜온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재벌에 관해 거론되는 여러 문제 중에서 일반집중과 다각화에 대해 외국과 개략적인 비교평가를 시도해본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벌의 일반집중이나 다각화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둘째, 정부정책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10대 또는 30대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집중보다는 시장집중, 그리고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기준과 자본시장제도 정비가 더 시의적절한 과제다. 셋째, 재벌에 관한 비판과 개선방안 논의에 앞서 기업형태 및 조직에 관한 비교제도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재벌, 일본의 게이렛쓰, 서구의 단일복합기업처럼 왜 나라마다 상이한 기업형태가 생성,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신제도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

경제력 일반집중

기업과 관련된 경제력집중은 일반(또는 생산)집중, 시장집중, 지분소유상의 집중 세 가지이다. 일반집중은 상위 몇대기업, 또는 재벌이 고용, 매출, 부가가치, 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비중을 의미한다. 반면에 시장집중은 개별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 집중도를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주로 시장집중을 경계하는 반면에 우리는 일반집중을 더 경계하고 우려한다.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목표를 명시하고, 30대 재벌을 선정하여 출자와 여신 등을 별도관리하는 것도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력 일반집중은 외국에 비

해 어느 정도인가. 집중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고 또 각각은 논란의 여지도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집중도와 매출집중도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100대기업의 종업원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고용집중도로 보면, 1994년도에 우리나라는 약 3.5%였다.

반면에 일본은 6.8%, 미국은 9%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고용집중도를 100대기업이 아닌 30대 재벌로 바꿔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94년도 30대 재벌의 고용집중도는 4.9%로서 위의 미국과 일본의 수치에 비해 여전히 낮다.

100대기업 매출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눠 본 우리나라 매출집중도는 69.3%이다. 이 수치는 일본의 71.7%에 근사하지만 미국의 37.3%에 비하면 약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매출집중도가 한국, 일본과 미국이 커다란 차이가 나는 까닭은 주로 기업형태와 내부거래관행의 차이 때문이다.

즉, 단일복합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100대기업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집단내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를 매출로 이중계산하는 관행 때문에 매출집중도가 과당계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 일반집중은 기업형태가 다소 유사한 한일간을 비교해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다.

일본의 기업집단에는 수직게이렛쓰와 수평게이렛쓰 두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수평게이렛쓰는 외양상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이 출자지분상으로 서로 얽혀있는 형태로서 사업구조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벌형태와 비교적 유사하다. 비록 기

획조정실과 같은 중앙통제부서는 존재하지 않아도 사장회의를 통해 공조경영을 하는 점도 비슷하다. 따라서 이 수평계이렛쓰로 분류되는 일본의 6대그룹(구 재벌계인 三井, 三菱, 住友와 은행계 기업집단인 芙蓉, 三和, 第一勸銀)과 우리나라의 6대재벌을 비교해보면, 매출집중도(금융업 제외)는 각각 51.2%와 52.5%로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집중도에서는 일본이 4.0%, 한국이 2.5%로서 일본이 우리보다 높다.

결국 고용이나 매출로 본 경제력 일반집중은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결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지표도 보완 검토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위 두 지표를 통해볼 때, 재벌의 경제력 일반집중을 우려하는 우리사회의 시각은 다소 과장된 셈이다.

반면에 시장집중을 경계해야 하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도 일반집중 그 자체는 그다지 문제거리가 아니다. 미국의 산업조직학자 배인(J.Bain)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력 일반집중이 반드시 시장집중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집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력집중은 경제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같이 실증과 이론 양면에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집중에 대해 우려가 깊은 까닭은 일반집중과 시장집중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일반집중을 정책건제의 주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구조를 형성, 유지케하는 기업집단의 행태적 측면을 견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다.

다각화

모든 핵심산업에서 계열사를 운영하는 재벌의 사업구조는 흔히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부정적 평가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를 구분하여 전자는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지만 후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전자, 기계, 화학, 정보통신, 금융, 건설 등 모든 전략업종에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벌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도 기존사업과 무관할 수 없다.

더욱이 기술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 융합하여 신상품, 신산업이 속출하는 추세에서 관련성 여부를 논하는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또 그나마 비관련 다각화로 분류할 수 있다해도 업종마다 상이한 경기변동사이클에 대비하는 위험 분산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선악을 따질 이유도 없다.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비판은 흔히 재벌이 거느리는 계열사의 수와 시계열적인 증가추세를 이유로 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일본의 6대그룹을 볼때, 계열회사수의 과다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6대그룹 사장회의에 참석하는 평균 멤버기업은 약 30여개이다. 그러나 사장회의의 멤버는 아니지만 각 그룹이 50%이상을 출자한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1989년의 경우 총 4천4백28개로서 그룹당 738개사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이 평균적으로 거느리는 22.2개의 계열사와 비교되지 않을만큼 높은 수치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다각화를 곱지 않게 보는 까닭은 다각화 자체보다도 다각화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불

건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가는 신규사업에서 기대되는 이익과 위험, 즉 상대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영역을 결정한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비판론자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일 만큼 다각화의 상대비용이 낮았다. 예컨대 신규사업에 따르는 부동산과 금리차 지대가 적지않기 때문에 사업의 이윤획득가능성이 낮아도 다각화를 추진할 유인이 있었다.

사업도 본 궤도에 이르면 보호내수시장에서 돌파점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화에 따른 기대이익은 그만큼 높았다. 게다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한 사업은 불황에 처해도 정부가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주는 관행 때문에 기업가가 부담하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가용한 경영자원이거나 이윤획득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배려없이 기업집단간의 외형경쟁이나 선점투자차원에서 신규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만성적자 계열사가 퇴출하지 않고 재벌내에서 온존된 까닭도 부분적으로는 이같은 사업외적 지대와 편익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상황은 다르다. 특히 기업가는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한계 기업을 마냥 품고있을 수 없게끔 시장환경이 바뀌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 이유를 들면, 첫째, 자본개방과 지가안정이다. 그만큼 부동산지대나 금리차지대 등 사업외적 지대를 얻을 여지가 줄었다. 둘째, 소위 무국경 무한경쟁시대로 표현되는 경쟁환경이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던 반도체 경기의 하락에서 보듯이 경쟁격화는 이윤을 저하로 귀결된다. 이는 주력핵심산업이라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위한 재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적자계열사를 보조하기 위해 흑자계열사의 자금을 소진하는 행위도 연쇄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 질 좋고 값싼 중간재를 외부조달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 제품이라고 품질과 관계없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행태로는 경쟁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6대그룹의 내부거래가 80년대 말 평균 13%에 이르던 것이 최근에는 10%미만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정보 접근도의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도 서서히 나타나는 주주행동주의로 인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계열사간 상호보조도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각화에 대한 정부나 일반의 시각도 변해야 할 것이다. 사업영역의 선택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신규사업의 성장성, 기대위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불확실한 미래의 예측을 전제해야 하는 기업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업종전문화제도처럼 기업의 활동영역을 적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직접적 관여는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한다. 미래의 환경변화방향도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기업가가 순수한 사업성과 기대위험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운용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활동규제가 사업외적 지대를 발생시켜온 원인임을 인식, 재검토해야 한다. 또 다각화 비용이 과거와 전혀 다른 미래에도 재벌들이 과거와 같은 사업영역확장패턴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로 한 정책판단도 지양해야 한다.

전략업종이나 첨단유망사업이 아닌 한 만성적자 계열사를 더이상 포용할 유인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재벌이 사양업종을 퇴출시키지 않음으로

써 산업구조를 경직적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과거 지향적이다. 미구에 재벌들도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생산기지를 재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고용안정과 사업구조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관해 논의하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일 것이다.

기업연구방법론의 재고

1994년도에 고용기여도 4.9%, 부가가치 기여도 13.9%라는 수치에서 보듯 30대 재벌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의에 비해 재벌형태의 생성과 발전배경, 전망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재벌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정책처방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도 상당부분 여기에 기인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객관적인 기업연구를 지연시킨 주 원인은 신고전주의 경제학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신고전주의는 의사결정이 완전 분권화된 경제에서 가격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가격메카니즘 분석에 경도된 신고전주의는 가격이 아닌 다른 조정원리, 예컨대 권위나 위계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이나 경제조직에 대해 무관심했다.

기업은 노동, 자본 등의 투입물을 기술적으로 결합, 최종재로 전환시키는 생산함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기업가나 경영자도 특별한 자질이나 역할이 기대되지 않는다.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들은 그저 생산함수의 작동과

정이나 관리하는 자동인형과 다름이 없다.

이같은 신고전주의 패러다임이 기업의 제도, 조직, 형태, 규모 및 분포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오히려 당연하다. 신고전주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고전주의 분석틀로 설명할수 없는 경제현상을 시장실패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코스(R.Coase)가 '신고전주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업조직과 관행에 대해 독점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속성이 있다' 하고 윌리엄슨(O. Williamson)이 '1945년부터 75년까지 미국의 반독점법은 이런 전통하에 집행되었다'고 한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제 '친숙치 않은 기업조직이나 관행, 경제제도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신고전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기업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거래비용경제학, 진화경제학 등 신제도 학파의 분석방법은 하나의 대안이다. 특히 재벌에 관해서는 비판과 개선방안 논의에 앞서 기업형태에 관한 비교제도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재벌은 다양한 사업을 사업부제로 운영하는 서구형 단일복합 기업형태나 멤버기업간 동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공조경영을 유지하는 수평적 위계형의 일본 게이렛쓰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왜 이처럼 나라마다 상이한 기업형태가 발전해왔고 또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들이 나름대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형태로 형성된 것이라면 현재나 미래의 환경변화는 과거의 거래비용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기업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경제효율의 관점에서 어떤 기업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관한 연구의 바탕위에 재벌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